

## 미·러 ‘新전략무기감축조약’ 타결의 의미와 전망

전 성 훈(全星勳)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서론

북한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게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4월 12~1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 평가회의가 뉴욕에서 열릴 계획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3개국과 주최국인 미국이 참가해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NPT 평가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조약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4월 8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미·러 정상이 만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서명하고, 핵군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결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적어도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하는 꼭 1년 전인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핵확산과 핵테러의 위협을 경고하고 인류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자신의 정책적 구상을 밝힌 곳이다. 역사적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서명 장소가 다시 프라하로 결정됨으로써, 이제 프라하는 국제 핵비확산 노력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핵파괴의 상징이었다면 프라하는 핵군축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협상과 내용

‘신전략무기감축조약’에 대한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 I’(START I)을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협상의 목표를 대폭적인 핵감축으로 잡는 대신에 2009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TART I의 후속조약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전략핵태세에 대한 감시검증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핵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협상은 세계 6개 도시에서 10차례의 전체회의와 14차례의 양국 정상 접촉을 포함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START I은 양측이 보유한 전략핵운반체계(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SNDV)를 1,600기로 제한하고 실전배치된 핵탄두도 6,000개로 규제한 조약이다. SNDV은 흔히 핵전략의 3축이라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장거리 폭격기로 구성된다. 소련의 붕괴로 일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소련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가 2001년 12월 감축 의무를 완료했고, 조약에서 정한대로 2009년 12월 5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START I의 정신과 합의를 발전적으로 승계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두 조약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이다. 지난 2002년 5월 부시와 푸틴은 양측의 실전배치 전략핵탄두의 수를 1,700~2,200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SORT는 2003년 6월 발효되었으며,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은 양측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략핵탄두의 수를 1,550개로, SNDV의 총 수를 800기로, 유지·보수중인 운반체계를 제외하고 실제로 배치된 SNDV의 수를 700기로 규제했다. 전략핵탄두의 수에서는 SORT에 비해 30% 감축하는 것이고, SNDV의 규모로는 START I에 비해 50%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START I을 준거로 삼아 엄격한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START I과 같이 발효 후 7년간의 감축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발효 후 10년이고 양측의 합의 하에 5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양측 의회의 비준으로 발효되는 데, 미국은 상원의 2/3, 즉 상원의원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발효될 수 있다.

## 평가와 합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가장 큰 의미는 출범 이후 미·러관계를 대결에서 협력의 관계로 “재설정”(reset) 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외교가 성공했음을 입증한 상징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새 조약을 통해서 미·러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오바마 대통령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을 공표하던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양측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도 앞당긴다고 선언하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두 번째 성과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러가 핵전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NPT 제6조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핵국들에 대해 핵포기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당장 4월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에 개최될 NPT 평가회의에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채찍을 들자는 미·러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전임 부시행정부가 기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국제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 즉 군비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과정을 복원했다는 것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군비통제를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은 물론 냉전시대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군비통제 프로세스가 정상궤도로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북핵문제에 주는 시사점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북핵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조약이 6자회담이나 NPT 평가회의 등 국제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촉구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핵보유국들이 NPT 상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북한도 NPT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핵확산을 하지 않는 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근거로 기존의 유엔제재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소 입장이 난처해진 나라는 중국이다. 일단 중국은 정책적으로 핵군축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에 대해 兩非論적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6자회담 당사국인 미·러가 핵군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을 두둔하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핵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경우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 이후 강화될 비핵화 공세를 예상하면서도 이 조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핵감축 보다는 계속 남아있게 될 핵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